

무력 제재 '구체적 조항 명시' 쟁점

■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 어떻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결의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무력제재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유엔 헌장 7장의 포괄적인 인용 여부가 최대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안보리는 10일(현지 시간) 이틀째 대사급 회의와 전문가회의를 병행하면서 미국이 제시한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을 놓고 문안조정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무력제재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는 유엔 헌장 7장의 포괄적인 적용 문제를 놓고 이사국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일본은 안보리에 내놓은 초안을 통해 유엔 헌장 7장을 포괄적으로 인용하려는 반면 중국은 헌장

중·러, 유엔헌장7장 무력사용 원용 부정적 북한 출입 선박 해상 검문 등 이전 가능성

7장을 인용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 소식통들은 전했다.

소식통들은 중국이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비군사적 제재조치는 반대하지 않지만 무력제재에 가능성을 좀 더 열어 놓은 유엔 헌장 7장을 이번 대북 제재 결의에 포괄적으로 인용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왕광아(王光亞) 유엔주재 중국 대사가 이날,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확고하고, 건설적이며, 적절함(appropriate) 그러나 신중한(prudent)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어떤 징계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 조치들은 적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소식통들은 또 러시아도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일본이 결의안의 신속한 채택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절충이 어떻게 이뤄지느냐가 결의안 채택시기를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안보리는 결의안을 최대한 빨리 채택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대사급 회의와 실무급 전문가회의를 병행하고 있다. 아직 비군사적 제재에선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의견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핵 관련 의심 선박의 북한 출입시 해상 검문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이사국들이 대북 제재 자체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며, 이사국들이 이번 주 안에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해 결의안 채택이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소식통들은 늦어도 13일에는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현장과 시각 ■

지역통계가 없다



장필수

경제부 차장

6개월간 계속된 '광주·전남지역 상권분석'이란 본보의 주간 연재가 오늘자로 끝났다. 총 22회에 걸쳐 광주·목포·순천·여수·광양지역 20개 상권을 취재하다보니 많은 로드샵(길거리 상가) 상인들을 만날 수 있었고 체험경기와 이들의 애환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취재과정에서 보람도 있었지만 지역 언론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기획물인지라 쉽지 않은 점도 많았다.

가장 큰 어려움은 각 지역별 대표 상권을 비교·분석해 어느 상권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보여주는 결산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었다. '대형 유통업체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는 로드샵 상인들의 아우성을 매출액과 순이익 등을 실제 비교해 사실여부를 가리겠다는 취지로 결산편을 기획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마땅한 통계를 찾을 수 없었다.

대표 상권에 모두 입점한 공통 브랜드를 선정, 각 점포별 매출액과 순이익의 비교를 통해 상권별 부침을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 대형 유통업체와 로드샵간 영향여부는 지역통계가 부실해 명확한 규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통계란 '제한된 자료나 정보를 토대로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 과학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이라고 한다. 통계라는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시행착오나 위험성이 가장 적은 의사결정이나 계획을 수립한다는데 중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지역통계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은 비단 이번만 이 아니다. 크게는 광주시민들의 소득 규모에서부터 작게는 길거리 상인들의 업종별 분포까지 지역 실정에 맞는 통계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지역통계 부재의 원인은 통계청 등 관련 기관들의 경우 예산이나 인력문제로 자체 조사나 로(Raw) 데이터 작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광양시가 광주·전남지방통계청과 협약을 맺고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광양시는 통계청의 기술지원을 받아 지난달 1차 시험조사를 마쳤으며 내년 3월께 본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전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3천만원이면 기초조사가 가능하다"며 "나주시도 농업관련 조사를 위해 통계청과 실무자 협약을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지역통계는 예산과 인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자체의 '의지(意志)'문제라 아니 가 싶다. 길거리 상인들도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통계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bungy@kwangju.co.kr



곤혹스런 부시

강경 일변 대북정책 비판론 고조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북미간 양자회담 배제를 골간으로 한 조지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론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 전문가와 미국 의원을 일부는 부시 정부의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이 김정일 위원장을 '핵 도박'으로 갈 수 밖에 없도록 압박한 측면이 적지 않다면서 대북정책의 전면 대수정을 요구했다.

미국 일간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도 이날 북한의 핵실험은 직접적인 대화 창구를 외면하는 등 조지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전반적으로 실패한 탓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는 "지금 전세계에서 여러 어려움을 맞고 있는 이유를 중 하나는 부시 행정부가 외교를 '착한 행동'(good behavior)에 대한 보상쯤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지금 친구들과만 대화를 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한반도 전문가로 북한을 수차례 방문했던 공화당의 커트 웰던(켄실베이나) 의원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접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북미간 양자회담 착수를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판문점에 쏠린 눈 북한이 핵 실험을 실시한 지 사흘째인 11일 판문점에는 수많은 내외신 취재진들이 몰려 남북 단단의 현장인 판문점 상황을 취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떤 제재방법도 효과 없다"

■ 국제사회 北 효과적 압박고심

대북 제재안을 논의중인 국제사회가 이미 고립된 절름발이 경제의 북한을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예상보다 훨씬 어렵다는 판단으로 난항에 빠져 있다.

홍콩의 영문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1일 현재로서는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안도 확실한 효과를 거두거나 현실화되기가 어렵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북한으로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국경이 '경제 생명선'인만큼 제재가 성공하기 위해선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철저하게 협조해주는 것이 가

장 중요하다. 제재안 논의에 참여중인 일본의 한 외교관은 "초기 검토 결과 중국과 주변국은 북한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신속하게 전하기 위해선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면서도 "그러나 제재 결과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엄청난 검토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식량 및 연료 원조량의 70%를 공급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몇개월간 교역량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북한 경제는 미국의 금융제재나 고립으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황이다.

현지 외교관들은 북한에 대한 전면 경제제재가 11년간 식량난에 처해 있

는 북한에 더 큰 자국적 혼란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향후 비인도적이라는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군사력을 동원, 북한을 타격하는 것은 논의 대상이 돼가고 있고 해상봉쇄나 해상검문도 북한이 실질적인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만큼 함부로 선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가장 효과적인 제재안 중 하나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의 중단이지만 이것도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한 외교소식통은 "석유접근을 완전히 끊는 것보다 어느 것도 영향을 더 손쉽게 굴복시킬 수 없다"면서 "그러나 이 방안은 현재로서는 협상테이블 밖에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北 추가 핵실험" 日 언론 오보사태

일본 언론들이 11일 아침 근거도 없이 북한의 2차 핵실험 단행 가능성을 보도한 오보를 해 과문이 일었다.

이날 오전 8시30분께 일본의 민영 방송인 니혼TV는 긴급 보도를 통해 보통과는 다른 지진파를 일본 정부가 관측했다면서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영방송인 NHK도 북한에서 흔들림이 관측돼 2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당국이 정보수집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사의 보도가 나간 직후 AP와 로이터, 블룸버그 등 주요 통신사들은 일본 언론을 인용해 북한의 2차 핵실험 가능성을 전 세계에 긴급 타진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정부 관련 부처가 곧바로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보도 직후 정보 당국자는 "국내에서 지진파가 감지된 바 없다"며 "일단 외신에서 보도해 우리가 간파한 것은 없는지 확인해봤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지진파가 감지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정부도 일제히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고 언론 보도를 부인하고 나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북한의 2차 핵실험 사실을 확인할 정보가 없다"고 밝혔으며, 미국의 프레데릭 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소공심 품사 총집 제19회 **광주복음화대성회**

주제: 무용의 영광을 힘써라 (마태복음 23:1)

일시: 2006년 10월 16일(월) ~ 18일(수) 저녁 7시

장소: 광주구동실내체육관 (광주구동)

주최: | 광종, 단국대, 광주광역시 기독교교회협의회
 후원: |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문화재단, 광주광역시 문화재단, 광주광역시 문화재단

문의: | 광주광역시청 문화재단 (061-270-1111) | 광주광역시 문화재단 (061-270-1111)

광주복음화대성회